

# 출발전부터 파열음... 갈길 먼 패스트트랙

### 연동률 50%·개혁법안 놓고 바른미래당 찬반 양론 평화당은 의총서 추인 미뤄 한국당 반발도 걸림돌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낼 테세였으나 여당 내 반발이 일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8일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으로 당내 추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연동률 100% 미 적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크고, 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추인을 미뤘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서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도 패스트트랙의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패스트트랙 성사까지는 험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선거제 개혁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불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내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출신 이준석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애초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 같은 중요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하나, 지난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의원 중 17인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미래당 출신 원내위원장 10명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의 진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원내 제2당

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후 새로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가운데 가장 먼저 의총을 열어 선거제 개혁안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는 당 초 소속의원 14명 중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천정배·박지원·김광수·이용주·정인화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넘겼으나, 중간에 의원들이 자리를 떠 5명만 남았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제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데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

어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돼 처리돼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구 의석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대하는 기류도 이어지고 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라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한국당 ‘통영 구애’

### 지도부 “지역경제 살리겠다” 4·3 보선 후보 지원

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8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통영으로 나란히 출격, 각 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통영의 옛 신아산초전소 부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선업 쇠퇴에 따라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살리기를 약속하며 민심 구애 행보를 펼쳤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여당만이 할 수 있는 당·청 협력을 통해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통영·고성의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의 도시사와 시장·군수,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통영·고성은 조선산업이 아주 활발히 이뤄져 경제가 활성화됐던 지역인데 전반적으로 조선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고용·산업 위기 지역이 됐다”며 “통영·고성 쪽 조선업 관련 여러 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통영 지원 방안의 하나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통영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

다. 특히 위원장에는 전현희 의원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하는 양문석 후보를 공동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어 통영·고성 지역구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통영 중앙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면서 약속지역으로 꼽히는 이 지역 탈환 의지를 다졌다.

이에 맞서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도 오후 통영에 직접해 정적식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에 앞서 경남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황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좌파선동정치’로는 통영·고성의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 대표는 “대체 이 정권이 얼마나 통영·고성을 무시하면 이리 짚도 안 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겠느냐”며 “통영·고성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선동전문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인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저와 손발을 맞춰 통영·고성과 나라 발전을 위해 큰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통일부 “남북 경협위해 사전준비”

### “제재 틀 내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환경 조성”

통일부는 18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지난달 24일 서면 보고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남북 경협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공동특구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발전시키면서 남북 간에도 공동연구 및 현장조사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및 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통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9월 평양 공동

선언’ 합의의 이행에 나선다. 화상 상봉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유관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봉 행사용 모니터 등 물자구 매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 등을 제재 틀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 진출,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준비, 연중 상시적인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시행 등 다른 남북 당국 간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조치가 없어 남북교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들어 북한마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 1조 1036억원에서 지난해 28일까지 집행된 액수는 96억원으로 집행률은 0.9%에 머물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한국당 “입법 쿠데타”

### 의원·당협위원장 비상총회... 패스트트랙 저지 결의

자유한국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추진을 ‘좌파 연립정부 수립 계획’이라며 총력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애초 의원총회를 개최하려다 계획을 바꿔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원내위원장까지 포함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대규모로 열고 대어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좌파독재’, ‘애국 우파’, ‘민주당 2중대’ 등 좌우 이념을 가르는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이 정권이 정파적 이

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립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도 주장했다.

내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현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느냐,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문대통령 지지율 44.9% 취임 후 최저

### 리얼미터 조사... 국민 52%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최저치를 경신한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4.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준 취임 후 최저치 45.9%를 11주 만에 경신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오른 49.7%로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준 최고치 49.7%에 육

박하면서 50%선에 근접,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4.8%포인트 앞섰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설문(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2.0%(매우 찬성 20.9%·찬성하는 편 31.1%)로 나타났다. 반대는 28.1%(매우 반대 14.6%·반대하는 편 13.5%)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방수 부분설비(누수)

###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